

국가균형발전의 열쇠 전주 특례시 지정 '디딤돌'

지방분권·지정 당위성 모색... 시·국가균형발전위, 13일 포용국가 위한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전주시의 전주 특례시 카드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과 정에서 한 개 뭉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20분, 전주 그랜드 힐스호텔(옛 선플라워웨딩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김광수·안호영·정운천·오계제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언하고 지방소멸위기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이 각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제도팀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강원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질 예정이다. 국회의원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입법·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송효철 기자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폭 감소

전북경찰, 특별단속 추진 결과 112건으로 전년보다 39% 줄어 사망자 단 한건도 없어 부상자는 34.8% 감소한 206명 발생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8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2018. 11. 1~2019. 1. 31)'을 추진한 결과 단 한건의 음주운전 사망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기간 동안, 음주교통사고는 112건 발생해 전년 대비(185건) 39% 감소, 사망자는 없었

으며(전년 7명) 부상자는 34.8% 감소한 206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유창호법 시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8. 12. 18)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60%(-64건, 97-43건)로 큰 폭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전북 14개 지역 동시 단속과 유류가·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특

정시간대 구분 없는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벌칙 상향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연말연시 음주특별단속과 도민의 음주운전 의식개선을 통해 음주운전사고가 대폭 감소했다"며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강화기준(0.03%)이 올해 6월 25일 부터 시행 되면 음주운전 사고는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는 연중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쌀 수급 안정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전주시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총 7억7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확보, 총 190ha의 타작물 재배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농가 또는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면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경의 경우 상반기에는 벼 이외 어떤 작물도 심어도 무관하지만 이행 점검 기간인 하반기(7월 1일~10월 31일)에는 반드시 휴경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조사료와 일반·꽃거름 작물, 두류 등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 해당되며 타작물 수급 영향을 감안해 가격 변동이 크고 산지폐기 등 수급 조절 대상 품목인 배추와 무, 고추, 대파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평균 지원 단가는 1ha당 340만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꽃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기 전환필지(2017년 전환농지)의 경우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이행 점검 적합 필지를 신청 한 경우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하반기로 예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집중호부 침수피해 발생 소하천 정비

전주시, 2021년까지 35원 투입 객사천 정비 추진

전주시가 과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소하천을 정비한다. 전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7억 5000만원 등 총 35억원을 투입해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에서 전주천의 중류부도 유입되는 객사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객사천은 지난 2005년과 2009년 각각 집중호우로 침수 및 유실 피해가 발생한 하천이다. 시는 총 1.9km 구간의 객사천 중 1.6km의 하류를 기존 11m에서 13m로 확장하고 기존에 설치된 교량 9개소와 보, 나차공 4개소를 재정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실시계획을 발주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감정평가 후 용지보상을 진행하는 등 오는 2020년 착공을 목표로

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객사천에 인접한 완산구 대성동·색정동 주민들은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최초 수립 이후 기후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0년 빈도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정, 지난 2016년 11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했다. 시는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소하천 연안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인접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세관처럼 얽혀진 전주 지역의 모든 물길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되살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완성도를 높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주5일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예방을 돕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치매환자와 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도란도란 두뇌특목교실'을 주 5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의 치매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인지기능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뇌특목교실은 △경증치매 △인지저하 그룹 △치매고위험군 그룹 등 대상자를 수준별 4개 반으로 나눠 현재 치매예방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부터 치매로 진단받아 치료중인 치매환자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면근육 자극하기와 운문 자극하기 등 뇌신경체조

△치매예방체조 △지남력을 향상시키는 현실인식훈련 △집중력,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인지훈련학습지 △수예와 공작 같은 소근육 활동 등 다양한 감각활동과 실제 일상생활과 연관된 활동들로 진행된다. 앞서,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도란도란 두뇌특목교실'을 총 390회 운영, 총 2555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주시 모든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란도란 두뇌특목교실에 대한 자세한 사항 또는 참여신청은 전주시치매안심센터(063-281-6248, 6291~5)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군 댓글공작 관련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군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 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검찰이 위조증거 방치

검찰 과거사위, 검찰총장 사과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위조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던 유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북부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2013년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증거 조작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수사팀을 사법처리했지만 수

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검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검찰이 국정원과 협력해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일부러 불일치한 등 위법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과거사위는 회령에서 찍혔다고 주장했으나 위치정보(GPS)를 통해 중국 연길시에서 찍힌 것으로 드러난 유씨의 사진에 대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사진정보를 노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석훈 기자

법원,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1심 벌금형

6.1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은 취소된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95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유류비와 식사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480여만원을 비실명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1회 2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 숙지한 뒤 성실히 이행해야하나 어겼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하면서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1일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석훈 기자

'허위사실 공표' 김 교육감

항소 취하... 벌금 70만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 김 교육감은 후보자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지난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도민들에게 법정에 서는 모습 대신 혁신 교육의 완성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해 1심의 원심으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전북교육청의 인사 만족도는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강석훈 기자

산후조리원서 4주된

신생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지난 8일 전주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호흡기 세포유합 바이러스(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재채기 증세로 왔던 생후 4주 된 신생아가 RSV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도와 보건당국은 조리원에 있던 신생아와 산모 등 42명을 모두 귀가 조치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을 폐쇄했다. 또한, 보건소와 함께 조리원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역학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인 이 조리원의 다른 신생아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계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도 증세가 호전돼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며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SV는 늦가을부터 겨울철까지 유행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1세 이하의 영아들에게 모세기관지염을 주로 일으킨다. 심한 경우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증상은 기침과 발열 등이며 어린 영아의 경우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강석훈 기자

휴대폰과 신용카드 훔친 일당 입건

장례식장에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모씨(50)와 B모씨(36)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 4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충전중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케이스에 보관 중인 신용카드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로 평소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적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7일 오후 2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A모씨는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익산시 자전거 훔친 20대 달미

익산경찰서는 지난 8일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A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시 30분경 익산 시내 한 빌딩 뒤편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해 지난 7일 오후 6시 30분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